www.kipf.re.kr

조세재정 BRIEF

2016. 12. 28(통권 제39호)

정부3.0시대 공공기관 협업과제 특징과 추진방향

박 한 준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조세재정 BRIEF

정부3.0시대 공공기관 협업과제 특징과 추진방향*

박한준 연구위원 (044-414-2353)

Ⅰ. 배경 ····· 02
Ⅱ. 정부3.0과 공공기관 협업과제 발굴 ····· 03
Ⅲ. 공공기관 협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06
Ⅳ. 정책제언 ····· 14

kipf

* 본고는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12.)와 『재정포럼』 2016년 11월호(제245호) 「공공기관 협업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소고」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발췌·정리한 것임

I 배경

- 정부부처 간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조직단위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해 정보 단절과 분절적 정책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
  - 관료제의 구조적 병폐인 부처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은 미흡하였음
  -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처 할거주의의 비효율은 협업이 아닌 타협이라는 미봉책으로 회피

-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던 농경·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시대 진입 이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단순한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관료제 형태의 조직운영방식이 더 이상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McGuire, 2006)

-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들이 정책문제로 생산되고 있어,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지향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
  -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단편적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수요를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오히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한 성과주의 확산은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나, 반면 정책문제와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동하여, 공공서비스 생산주체들을 종합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근시안적(myopic) 접근에 매몰시키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시킴
  - 경제적 효율성 우선주의의 선진적 행정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9.11테러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대응사례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다수조직들 간 협업실패로 인해 더 큰 사회적 재난을 초래하였음을 인정

-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부문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협업을 통한 서비스 창출 및 전달에 대한 논의가 확대

Ⅱ 정부3.0과 공공기관 협업과제 발굴

●● 우리나라에서도 분절적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는 정부3.0 혁신노력으로 구체화

-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제시
- 정부, 기관, 국민 상호간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여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방법론으로 삼고 있음

〈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

구분	정부 1.0	정부 2.0	정부 3.0
운영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운영주체	관 주도	제한된 참여	능동적 참여, 개방, 협력
서비스	일방향	양방향	양방향, 맞춤형
제공수단	직접방문	웹기반	모바일

출처: 정부 관계부처 합동(2013)

●●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 부처산하 공공기관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협업과제[1]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협업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정부3.0의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1) 2013~2015년 동안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 리스트는 〈부표1〉 참고

- 협업과제의 평가는 과제발굴단계에서 협업의 필요성, 실행가능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과제명시화단계에서 목표설정의 적절성, 지원체계 구축수준, 기관 간 역할의 명확성 등을 평가
- 과제추진단계에서 일정준수 여부, 이행상황 점검 및 이견조정의 원활성 등을 평가하고, 과제완료단계에서는 협업의 효과와 발전방안 수립의 적절성을 판단

●● 지난 3년간 핵심협업과제로 57개 과제들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과제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정부부처 17부(2013년 이후) 가운데 12개 부처의 산하기관이 지난 3년 동안 1회 이상 협업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관찰

〈 산하 공공기관 규모와 핵심과제 주관기관 규모(연도별, 주무부처별) 〉

(단위: 개)

주무부처	2013		2014		2015	
	산하기관	주관기관	산하기관	주관기관	산하기관	주관기관
고 용 부	12	1	12	0	12	0
공 정 위	1	1	2	0	2	1
교 육 부	38	0	21	0	21	1
국 조 실	24	1	24	0	24	0
국 토 부	33	0	23	3	24	4
금 융 위	9	2	12	3	8	2
농 림 부	15	0	12	0	13	2
문 체 부	34	3	35	2	36	2
미 래 부	-	-	39	1	41	1
복 지 부	18	1	18	3	20	5
산 자 부	71	6	52	6	52	4
행 자 부	6	0	5	1	3	1
기타부처	34	0	49	0	60	0
소계	295	15	304	19	316	23

주: 1. 소속기관이 2013~2015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협업 핵심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던 부처 리스트임
2. 부서 외청(ex: 중기청, 특허청) 소속기관은 상위부서(ex: 산자부)의 소속기관으로 간주하여 카운트하였음
3.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 당시에는 미래부가 출범하기 전으로 현 미래부 소속기관들이 교육부(前 교과부), 산자부(前 지경부) 등에 산재해 있으며, 마찬가지로 2014년도는 현 행자부(前 행안부, 안행부)의 개편으로 현재 인사처, 안전처 소속기관들이 행자부 및 산하 외청에 포함되어 있음. 해당 부처의 경우 조직 개편 이전 주무 부처를 기준으로 공공기관을 카운트하였음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산업부, 문화부, 국토부, 복지부, 금융위의 산하기관들이 타 기관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관찰
- 지난 3년간 산업부 기관이 16개, 복지부 기관이 9개, 국토부 기관이 7개, 문화부 기관이 7개, 금융위원회 기관이 7개 과제를 수행

●● 주관기관의 지정유형별로 협업수준을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과제들이 다수 선정되어 추진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첫 해인 2013년 178개 기타공공기관 중 5개 기관이 협업을 주관하였으나, 이후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개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2014년 2개, 2015년 1개 기관만 참여 확인
- 이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협업과제가 기타공공기관보다는 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만 인센티브로 작동하기 때문임[2)]

〈 핵심협업과제 주관기관 규모(유형별) 〉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주관기관	전체	주관기관	전체	주관기관
공기업	시장형	14	2	14	1	14	5
	준시장형	16	0	16	1	16	2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17	5	17	5	17	4
	위탁집행형	70	3	70	10	69	11
기타공공기관		178	5	187	2	200	1
소계		295	15	304	19	316	23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협업과제의 복잡성을 참여한 기관의 특성에 따라,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협업, 주무부처가 상이한 공공기관 간의 협업,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57개 과제 중 주무부처가 동일한 기관 간 협업사례는 13건(22.8%)이었으며, 가장 많은 협업사례가 관찰되고 있는 주무부처가 상이한 기관들이 협업한 사례 26건(45.6%)의 절반 수준

2) 공공기관 핵심협업과제로 추진된 과제 중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대상범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임

- 동일한 주무부처 산하기관의 협업보다는 사업의 감독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부처별, 기관별 칸막이를 뛰어넘는 협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반증
-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주무부처가 동일한 공공기관 간 협업사례와 유수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협업 참여기관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참여기관 복잡성 유형에 따른 협업과제 규모 〉

(단위: 개)

구 분	기 관 단 위	2013	2014	2015	2013~2015
공공기관 간 협업	주무부처 동일	3	5	5	13
	주무부처 상이	10	10	6	26
공공기관+외부협업	공공기관 + 지자체	1	1	4	6
	공공기관 + 민간단체	1	3	7	11
	공공기관 + 지자체 + 민간단체	0	0	1	1
소 계		15	19	23	57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Ⅲ 공공기관 협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결과

●● (조사개요) 공공기관 협업과제의 수행실태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핵심협업과제 참여기관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지난 2016년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공공기관 협업과제 담당자 인식수준 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시
- 담당자 추적이 가능한 2014년도(19개), 2015년도(23개) 협업과제에 참여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 담당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설문대상자 286명 중 154명이 회신하였음(응답률: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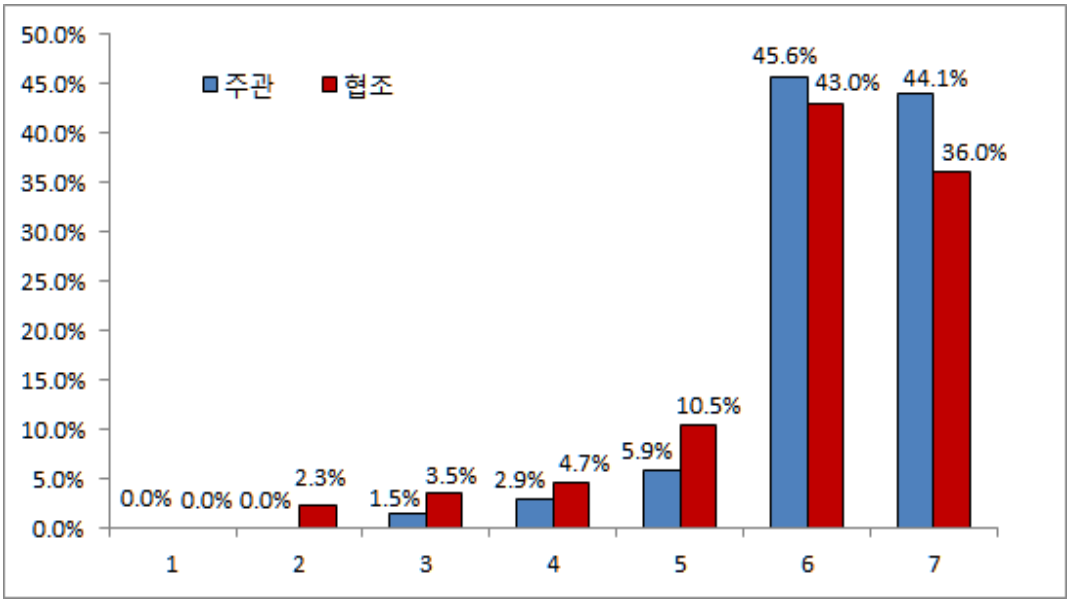
●● (기관목표 부합수준) 담당자들의 인식수준을 통해 협업목표와 기관목표의 동일성 여부를 관찰

-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협업과제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들은 참여과제의 목표가 기관의 핵심

목표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

- 주관기관의 경우 절대 다수가 협업과제가 기관목표에 매우 부합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협조기관 근무자들도 유사한 응답을 한 것으로 관찰

〈 협업과제의 기관목표 부합수준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추진 원동력)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심의를 거쳐 선정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협업의 필요성과 추진 원동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담당 참여자들은 다양하게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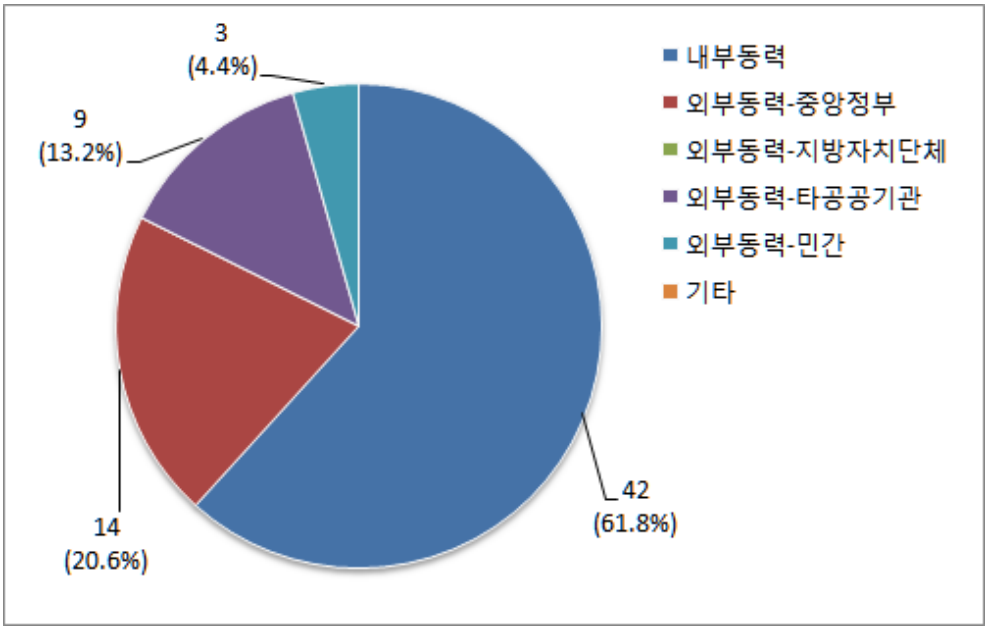
- 내부동력으로는 소속기관 기관장, 담당부서장, 부서내부의 의지 및 필요성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동력은 소유권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업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중심의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또는 민간에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
- 주관기관이나 협조기관 모두 외부적 자극보다는 내부의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된 과제들이 상당수에 이름

-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61.8%가 협업과제의 추진동력이 기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반면, 협업 활성화를 권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주무부처 등 중앙정부의 영향을 가장 핵심적인 동력으로 응답한 경우는 20.6%에 그치고 있음

- 협조기관 근무자의 경우에는 39.5%가 협업과제의 핵심 추진동력이 기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33.7%의 응답자가 중앙정부의 영향이 협업 추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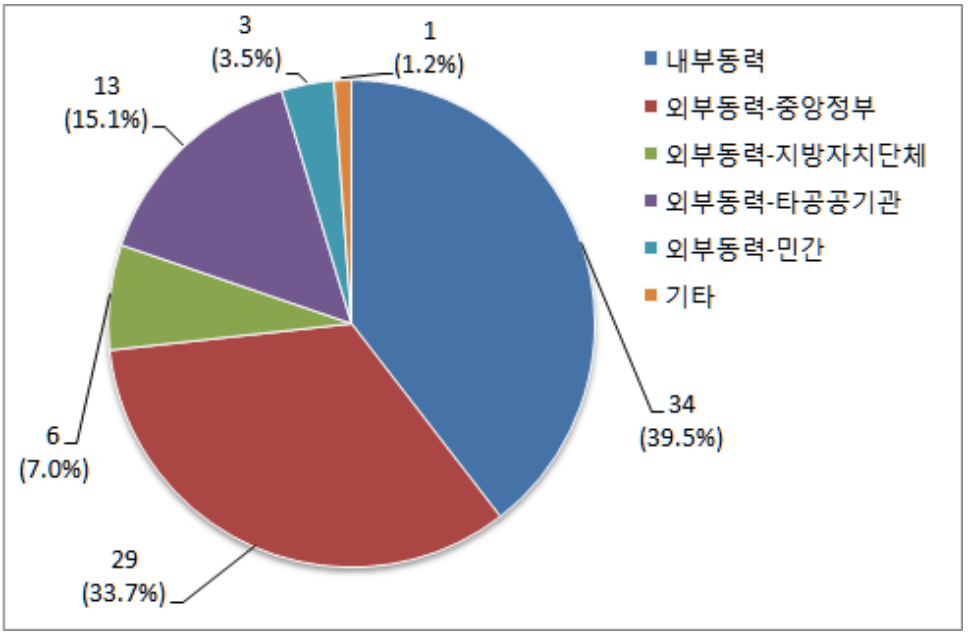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추진동력으로 평가한 담당자의 비중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이 동일하나, 협조기관의 경우 내부동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비중은 주관기관에 비해 낮았음
  -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에 내재되어 있는 필요성이 주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협조기관의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영향력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

〈 주관기관 협업과제 추진동력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협조기관 협업과제 추진동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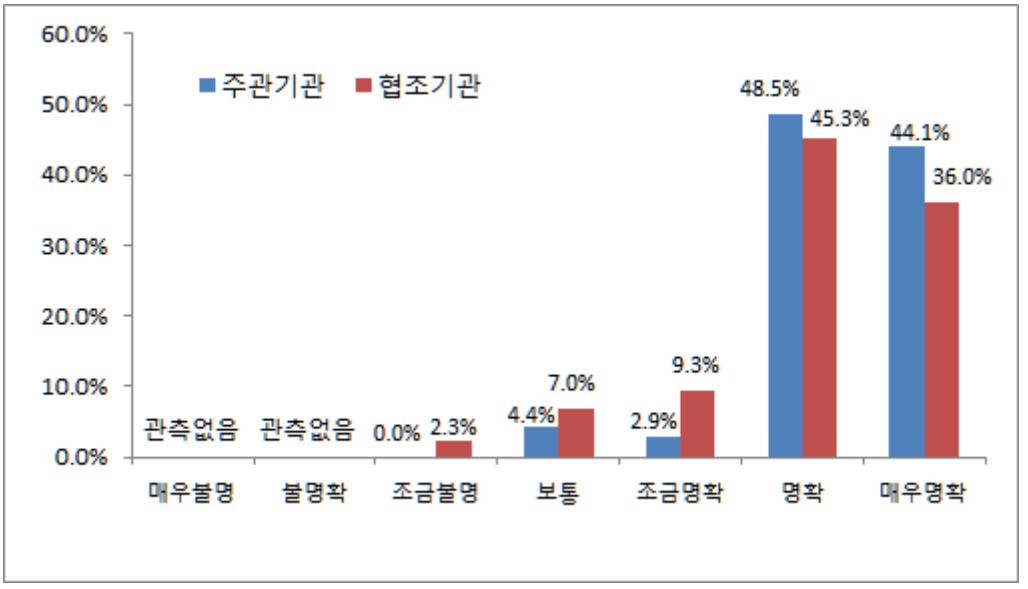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역할 명확성) 참여기관의 역할과 책임수준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역할 구조화의 명확성 수준을 관찰

- 협업구조가 복잡할수록 역할과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선행조건임
-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담당자들 대부분 참여하였던 협업과제에서 그들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원활도와 유사하게 주관기관이 협조기관에 비해 역할 구분이 좀 더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 참여기관 역할구조화 명확성 인식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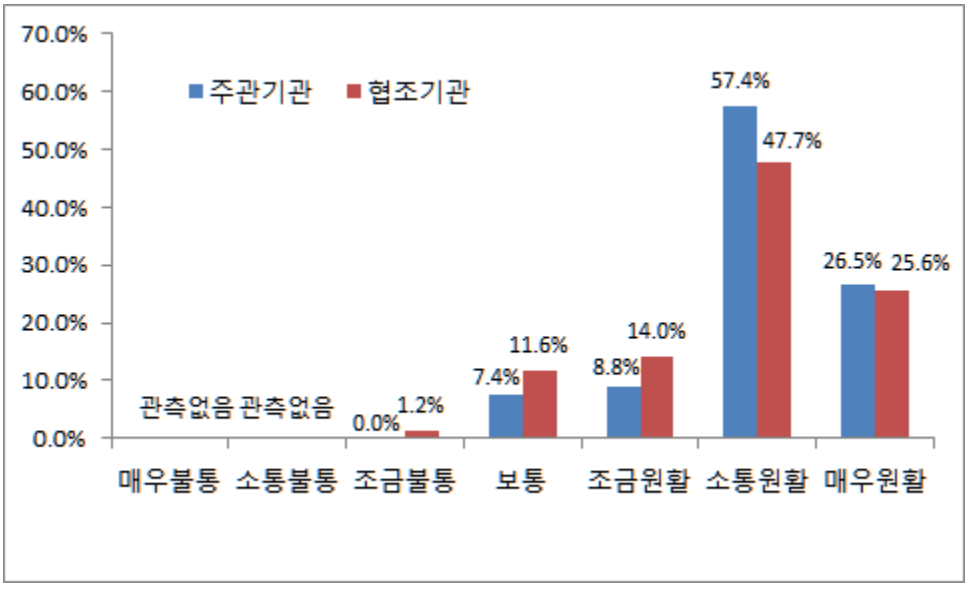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소통 원활성) 참여기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여부도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사이에 미미한 수준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 경영혁신과 조직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관리변수로 측정
- 주관기관, 협조기관 근무자 모두 협업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협조기관에 비해서는 주관기관 근무자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였던 것으로 인식
  -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이라는 협업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화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음

〈 참여기관 간 의사소통 원활성 인식수준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 의사소통의 원활성 수준과 역할 구조화 명확성 수준 모두 주관기관이 협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렇게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차이들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의 지위에 따라 일관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 수평적 관계에서 주관기관이 협조기관의 입장을 이해하는 균형적 시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

●● (협업 성공요인) 기존 연구결과에서 협업의 성공요인들로 평가받았던 실무자의 의지, 상호신뢰, 내부협업문화, 소통, 리더십, 재정지원, 비전공유 등의 중요성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담당자 사이에 공통적인 인식과 함께 상대적 차이가 있는 것이 관찰됨

-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여부에 상관없이 상당수 담당자들이 상호신뢰를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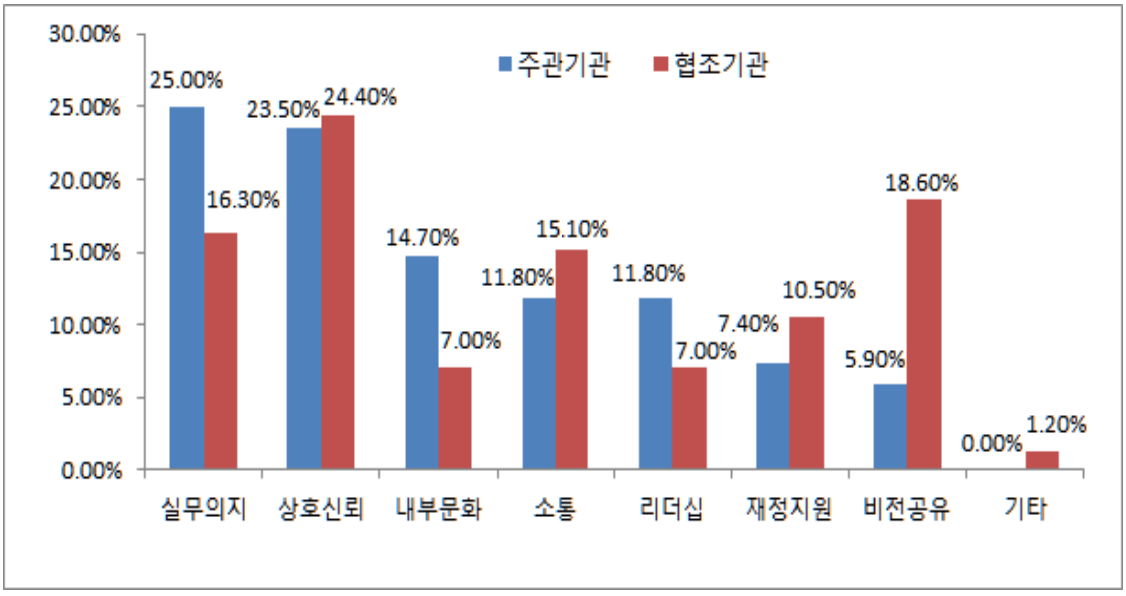
●● 양자 모두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동안, 주관기관 협업담당자들의 인식수준에서 흥미로운 점이 관찰됨

■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실무자의 의지를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 협조기관 담당자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전 공유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차이 역시 참여기관들의 위상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주관기관은 내부적인 추진동력을 강조하는 반면, 협조기관은 협업에 대한 비전 공유가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
- 주관기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협조기관과의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암시

〈 성공결정요인에 대한 인식비교(기관유형별)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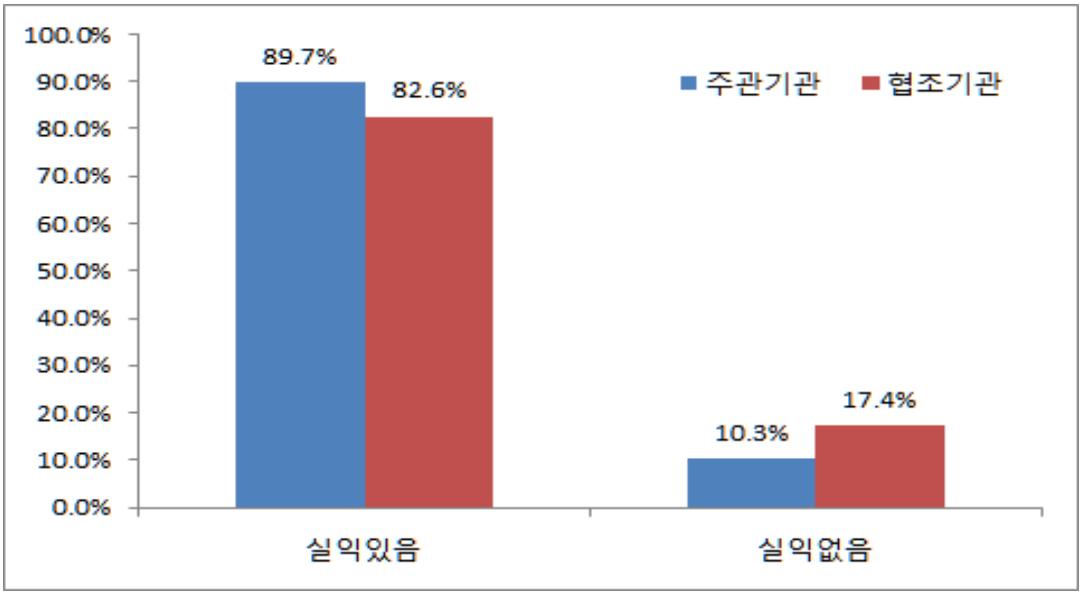
●● (협업실익) 협업참여자들은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모두 내부 담당자의 80% 이상이 협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생산했다는 점에 동의

■ 앞서 관찰한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여 정리한다면, 정부 주도로 선정되어 추진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기에, 그 성과와 실익에 대해서도 담당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협업의 실익은 주관기관 담당자들이 약 7.1%P 정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도 앞서 관찰된 참여지위에 따른 상대적 인식수준의 차이와 일관된 패턴임

- 즉, 주관기관이 얼마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조기관과 원활한 협업을 위해 노력하는가에 따라 협업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협업실익에 대한 인식 〉



출처: 공공기관 협업과제 설문조사(2016.10.)

Ⅳ 정책제언

- 공공부문에 경쟁이 도입·심화되면서 부처 등 단위조직 간 칸막이가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는 시점에서 협업을 활성화하려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급자적 입장에서 획일적인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이라는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 및 공급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공동사업을 시도하는 것은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발굴이라는 사회적 지향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임
  - 참여기관 협업과제 담당자들의 인식수준 조사를 통해서 2013년 이후 정부 주도로 추진한 협업과제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확인
  - 다만, 협업과제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성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현재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적인 협업추진체계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인 과제발굴과 성과를 실현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수검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협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인센티브 부재 시 협업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 확인
  -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3.0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방향을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적 협업이 기관 내부의 필요와 외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관 외부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협업 발굴과 성과실현에 대해 기관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

- 협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참여자 및 기관들이 공동목적에 대한 이해와 합의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협업을 통해 추구하는 비전이 왜곡되지 않고 명확하게 공유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협업사업이 참여기관들의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함

●● 협업진행단계에서는 이의와 갈등 발생을 방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소통채널의 확보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소통의 빈도도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으나, 그보다도 소통의 품질을 강화하여야 함
- 소통을 위한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상호 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역할구조가 협업 속에 분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명확성은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을 더욱 원활하게 촉진시킬 수 있음

●● 주관기관은 협조기관의 입장에서, 협조기관은 공동협업자로서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성공요인

- 주관기관과 협조기관 담당자들이 협업을 대하는 자세의 영향도 큼
  - 협조기관의 경우 공동 주관기관이라는 수평적 관계보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원기관이라는 인식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큼
  - 협조기관도 공동 주관기관이라는 견지에서 협업에 참여하고, 주관기관들은 협조기관의 의견 및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
- 수평적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참여지위에 따른 잠재적 갈등과 인식의 괴리를 방지할 수 있음

●● 자율적인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가 실현된다면, 과거처럼 조직 이기주의에서 촉발된 무분별한 경쟁과 사업 확대로 기관 간 기능이 중복되고, 그로 인해 공공기관 생태계의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협업이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참고문헌

- 박광국, 『공공기관 협업촉진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3.
- 박혜영·김정주,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pp. 47-66.
- 박한준,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이광희, 『13년 완료 협업과제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14.

- Agranoff, R.,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N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4.
- Kilduff, Martin and Wenpin Tsai, *Social Networks and Organizations*, London: Sage Publications, 2003.
- Kaiser, F. M., "Interagency collaborative arrangements and activities: Types, rationales, considerations,"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1.
- Mandell, M. & Keast, R., "Evaluating network arrangements: Toward revised performance measures,"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30(4), 2007.
- Mattessich, P. W. et al., *Collaboration: What Makes It Work*, Fieldstone Alliance, St. Paul, 2007.
- Michael McGuire, "Collaborative Public Management: Assessing What We Know and How We Know I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 2006.
- Page, Stephen, "Measuring Accountability for Results Interagency Collaborativ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 September/October, 2004.
- Shuman & Twombly, "Collaborative Network Design Principles," *Collaborative Business*, 8, The Rhythm of Business, 2009.

〈 2013~2015 공공기관 협업과제 리스트 〉

연도	연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2015	1	고속도로 ex-허브 추진	한국도로공사
	2	산학공 협업을 통한 자원재활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한국동서발전
	3	국민맞춤형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산학연관 2인3각 물산업 한류를 꿈꾸다	한국수자원공사
	5	대·중소 해외동반진출 및 바이어 정보 공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인천공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인천국제공항공사
	7	원스톱 기술상용화플랫폼 지원을 통한 해외 동반진출	한국남동발전
	8	지역특화산업 R&D기술의 맞춤형 이전 및 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9	스마트폰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협력모델 구성·운영	한국정보화진흥원
	10	2015년 식품컨설팅사업 '브랜드컨설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1	장애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운전 적성검사 정보 공유	도로교통공단
	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부정사용방지 관리체계운영	사회보장정보원
	13	예술의전당 공연의 고화질 영상화사업	예술의전당
	14	지역특성 활용한 석유산업 발전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석유공사
	15	항공-관광 협력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한국공항공사
	16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ICCRS) 추진	한국장학재단
	17	유동성 애로기업 재기를 위한 협력프로그램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
	18	해외환자 의료분쟁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	위해공산품 신속 퇴출을 위한 사업연계	한국소비자원
	20	중소농식품수출업체 맞춤형 종합수출정보지 발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22	이전지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국민연금공단
	23	맞춤형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	1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자격정리 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공단
	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급자격 원스톱 조회서비스 도입	국민체육진흥공단
	3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 및 문화레저 활성화	한국수자원공사
	4	발전분야중소기업 에너지진단 서비스제공	에너지관리공단
	5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R&D과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기술보증기금
	6	지역중소기업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간 협력모델 구축	중소기업진흥공단
	7	찾아가는 벤처기업 주식업무교육·컨설팅	한국예탁결제원

연도	연번	과 제 명	주 관 기 관
	8	유망 콘텐츠 기업, 생존을 넘어 성공을 꿈꾸다	중소기업진흥공단
	9	사물인터넷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추진사업 연계	한국인터넷진흥원
	10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지원 융·복합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희망사다리장학생과 우수중소기업 간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 제공	한국장학재단
	12	의료관광 전문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매칭 시스템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악공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	산업단지 미활용에너지 공동이용 확대 및 에너지쉐어링 확산	에너지관리공단
	15	민간주거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자금보증 프로그램 마련	한국시설안전공단
	16	학자금지원 부정수급사례 방지를 위한 소득·재산조사시스템 구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7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한국시설안전공단
	18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업무 협업 강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9	가스터빈 정비예비품 공동운영을 통한 원가 절감	한국남부발전
2013	1	전자상거래피해 상담 일원화	한국소비자원
	2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보증 활성화	한국발명진흥회
	3	문화와 기술의 융합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	취업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산재근로자 재취업지원	근로복지공단
	5	지역별 무역투자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구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	실패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8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한국남동발전
	9	공공주택 공급시 서민금융상품안내 연계	한국주택금융공사
	10	공공기관 해외사업 전문인력 공동육성	한국전력공사
	11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보급	세종학당재단
	12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
	13	글로벌 수요연계형 교육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4	청년층 진로지도사업 체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서비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세재정 BRIEF

정부3.0시대 공공기관 협업과제 특징과 추진방향

2016. 12. 28(통권 제39호)

- 발행인 : 박형수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전 화 : 044-414-2503
- 팩 스 : 044-414-2509
- 인쇄처 : 아미고디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